

“문제 팔았다” 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

이달 1~14일 신고받아...5000만원 이상 45명 297명 중 188명, 검직허가 안 받고 영리행위 교육부, 감사원과 사후 조사...징계 여부 검토

현직 교사 297명이 지난 5년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판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 취한 대가가 5억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4일 간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지난 5년 간 사교육 업체 대상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다.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는 총 297명으로, 이 중 45명(15.2%)이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두 중·고등학교 교사로, 과거 수능 출제위원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학원에 문제를 팔아 무려 4억8256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 지역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는 자신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

해 이 같은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240만원을 번 서울의 사립고 화학교사 B씨, 사교육 업체 5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해 3억555만원을 받은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 C씨 등도 자신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A·B·C씨 모두 검직허가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영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허가받지 않은 검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A·B·C씨 외에도 297명 중 188명이 검직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검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7명이 신고한 영리행위는 총 786건이었다. 유형별로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341건이 검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로 나타났다.

신고는 했지만 신고서가 누락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사자들에게 자진 신고서 보안을 요청해둔 상태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활동 기간, 금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조사도 감사원과 함께 나선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조사를 마친 뒤 비위 정도, 검직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인사상 징계에서 경찰 고발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검직허가와 영리행위는 교원의 정상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와 연관된 영리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정상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상 징계는 ‘과면’, 이보다 심각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담양경찰, 보이스피싱·마약범죄·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집중

담양경찰서(총경 박승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무정·월산·용봉산·가사문학 5개 소의 치안센터장 발령을 이번 하반기 인사에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함평경찰,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전동차 후미 ‘LED 깜박이등 부착’

함평경찰서(서장 윤창기)는 지난 17일 어르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의 주 교통수단이 되어버린 전동차 후미에 ‘LED 깜박이등 부착행사’와 함께 교통사고예방 홍보유인물 배부 활동을 하였다.

함평=김광훈기자



순천경찰 왕조지구대, 민·경 합동순찰 실시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대장 심태식)는 16일 저녁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나주경찰,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최근 나주시 시민회관에서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주 동부소방, 광주천 상류에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천 상류에서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완도해경, 어선 전복사고 교육 및 예방 협의체 구성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7일 관계기관 및 어민단체와 합동 어선 전복사고 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태풍 탕’ 멈춘 5·18민주광장 승강기, 여전히 운행 중단

도시공사 “기계실 기판 교체 과정 길어져...빨리 보수마칠 것”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금남지하차가 승강기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금남지하차로 통하는 승강기가 ‘우천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2주 가까이 운행을 멈추고 있다.’

태풍 북상 당시 운행을 멈춘 이 승강기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금남지하차가 따르면 5·18민주광장 내 전일빌딩 방향에 설치된 지하차가 승강기가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이날까지 운행을 멈추고 있다. 승강기에는 “우천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운행을 일시 정지한다”며 “가까운 출입 계단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여있다.

지하차측은 이같은 안내문을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당시인 지난 8월 둘째주에 붙이고 승강기 운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 2주 가까이 되도록 이같은 조치가 여전히 적용

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5·18민주광장에는 지하차로로 통하는 승강기가 두 곳 더 설치되었지만 이용을 위해선 길을 건너야 하거나 직선거리로 약 200여m 동떨어진 곳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 5번 출구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은지(31·여)씨는 “아침부터 피아발이 내리쬐면서 지하차를 통해 걷고 싶었는데 때마다 보인 승강기가 운행을 멈추고 있어 아쉽다”며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천시 안전사고를 이유로 든 운행중단 안내문이 붙어있어 이상하다”고 했다.

양순임(71·여)씨도 “이따금 지하차로 갈 일이 있으면 줄곧 승강기를 이용했는데 최근 들어 도통 운행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어르신들은 계단이 영 불편하다”며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토로했다.

지하차측은 해당 승강기가 노후화된 데 따라 점검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승강기가 1989년 지하차가 개장과 함께 설치된 탓에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다 비가 오면 고장이 잦다는 것이다.

태풍이 불어 닥치면서 많은 비가 우려돼 운행을 잠정 중단한 것이 점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하차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수어번 비가 오면서 기계실의 기판이 고장났다. 기판에 들어가는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운행 일정이 늦춰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유나기자

이상민 “준비 없이 전시상황 대응 어려워...‘잼버리’는 비교 안 돼”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 주제...58만여 명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을지연습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 한 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문을 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은 처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상황을 가정하고 사이버위협과 가짜뉴스 등 최근 잦아진 위협상황에 대한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각자 역할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 잼버리 대원들의 대피 상황을 관리하면서 많은 인원을 빠른 시간에 이동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실제 전시 상황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것이고 사전준비 없이는 신속하고도 평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주 수요일(23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6년 만에 실시하는 훈련이라 보니 참여하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관리·인내하는 인력들도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안전하게 대피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과 관계부처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훈련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연습 과정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등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총무계획에 잘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1회 실시하는 정부 주관 비상대비훈련이다.

이번에는 한·미·군 당국의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연계 실시된다. UFS는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다.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책편성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상정·공포하는 ‘절차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진행한다.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조치 연습’도 진행한다. 복합적 위협상황을 부여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 조치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또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훈련, 사이버 위협 ‘소프트테러’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다.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對)드론 통합방호훈련’을 벌인다.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체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서해5도 배령·연평지역 주민 출도(出島) 훈련, 읍·면·동 생활밀착형 훈련, 접적(接敵)지역 자원동원 훈련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을 시행한다.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민방위 훈련이 이뤄진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뉴시스